

#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 방향

－ 재정 ·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

2010. 9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건전재정 관련 정책 이슈

2010. 9. 10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

# ■ 목 차 ■

## 1. 재정 악화 및 정부 대응

심각한 경제위기와 이에 대응한 확대 재정정책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재정이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재정악화를 경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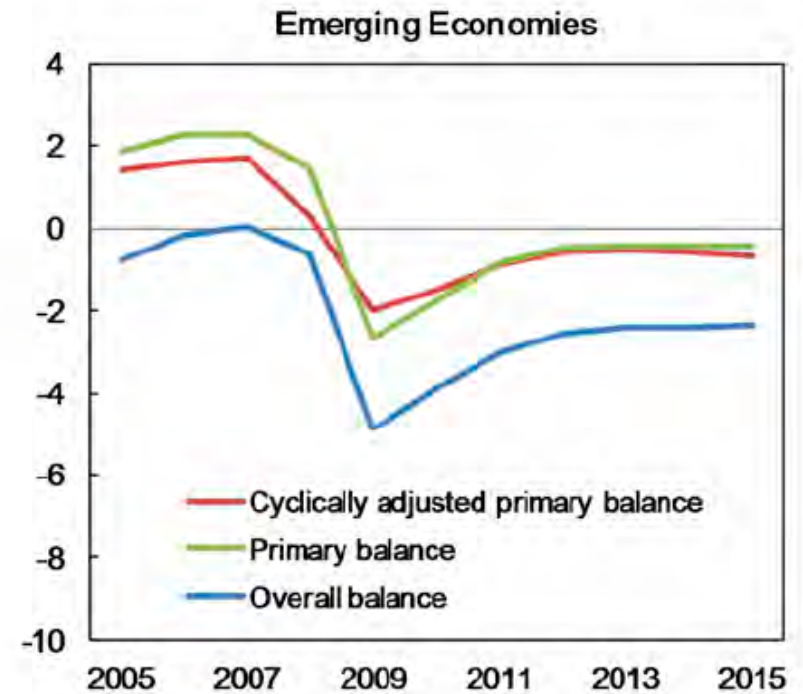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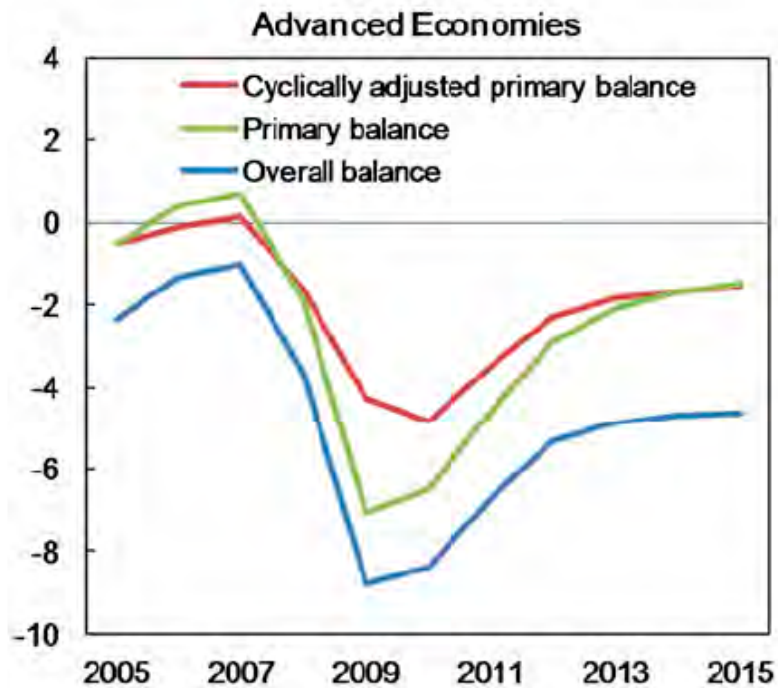
선진국일수록 재정문제가 심각한데 향후에도 매우 더디게 개선될 전망

[ 재정악화 규모 ] [ 재정악화 요인 ] [ 국가채무 건전성 ] [ 정부대응 ]

## 2. 향후 재정정책 과제

## 재정악화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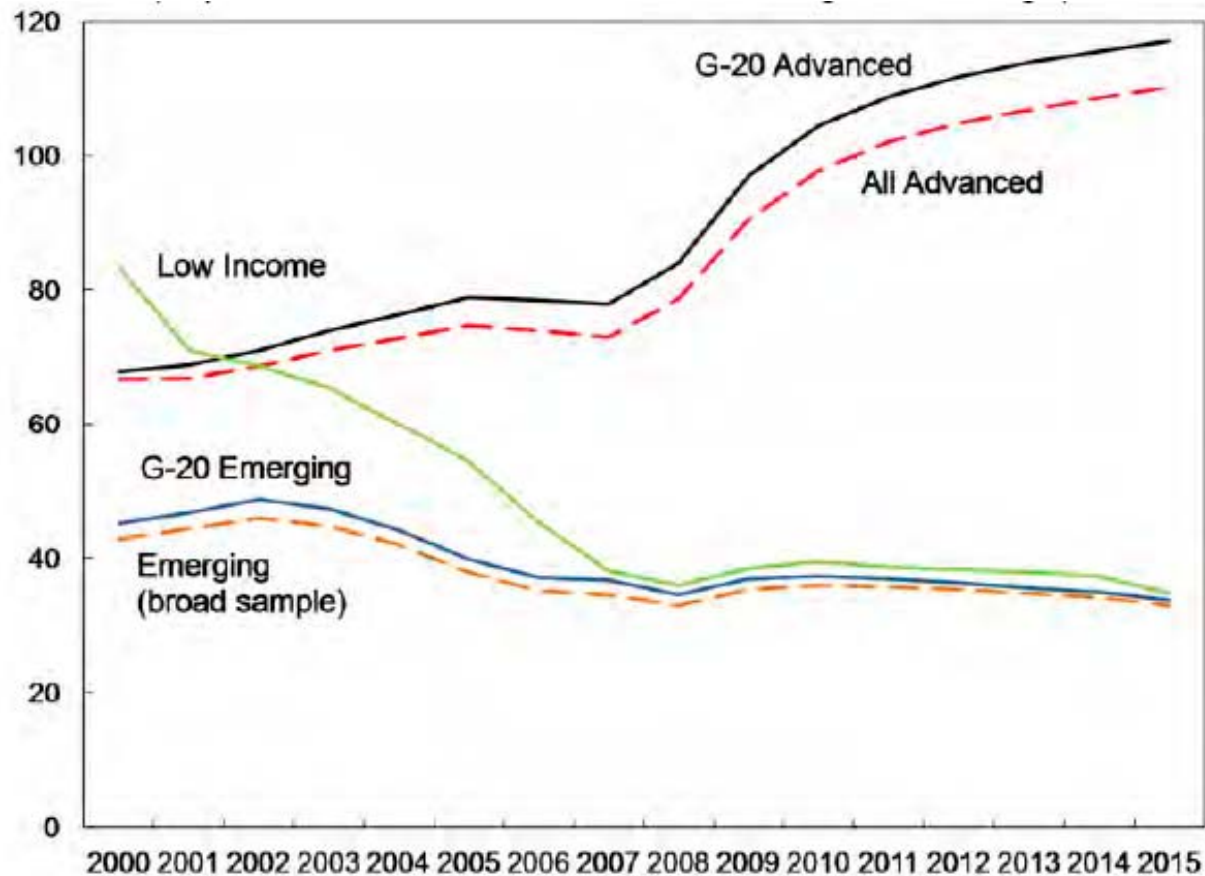
- IMF 추정(WEO 4월)에 따르면 **G20 선진국의 재정적자** 규모 (PPP GDP weighted)는 2007년 GDP 대비 1.7%에서 2009년 9.4%로 **약 8%p나 악화**되고, 2015년에도 재정적자 규모가 4.9%에 달할 전망
- 반면, G20 개도국은 수지균형(0.3% 흑자)에서 2009년 4.8% 적자로 악화되나, 2015년 2.5%로 적자감소 전망



(재정수지/GD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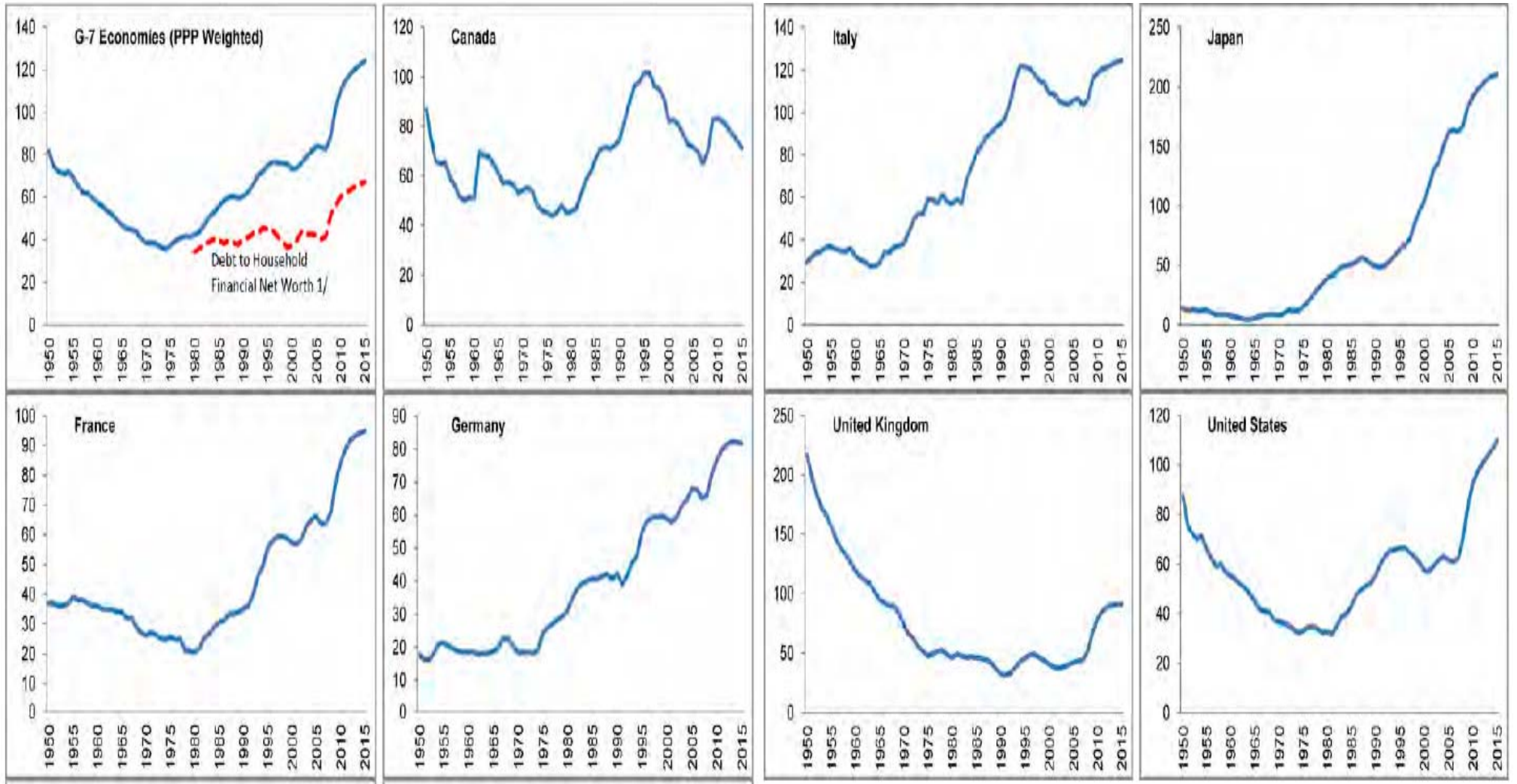
■ 대규모 재정적자로 **G20 선진국의 정부부채비율**(PPP GDP weighted)은 2007년 77.9%에서 2009년 96.9%, 2015년 117.1%로 8년간 무려 **약 40%p, 약 1.5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PIGS 등 일부 유럽국가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반면, G20 개도국의 정부부채비율은 40% 미만에서 안정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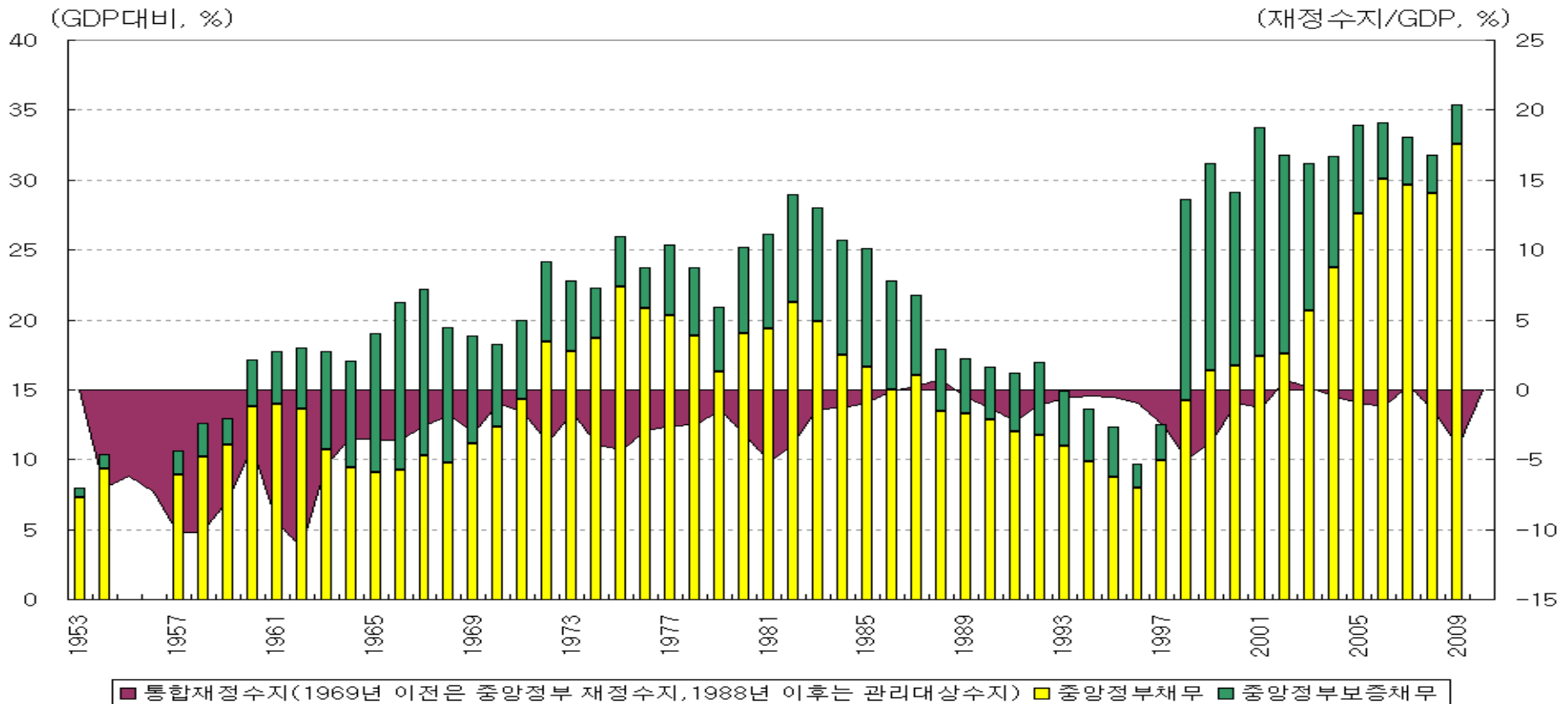
(일반정부 총금융부채/GDP,%)

## ■ G7국가들의 정부부채비율(%) 추이 및 전망 (1950-2010년)



## ■ 우리나라도 재정이 양호한 편이지만, 금번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악화 규모가 과거 추이에 비해 매우 큼

- 위기발생 이전인 2007년 대비 2014년(전망치)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비율 악화 규모는 G20 국가 중에서 6번째로 양호하고, 지난 1년간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비율 전망치 개선규모도 우리나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09년 결산기준 재정적자 규모(GDP대비 관리대상수지 4.1%)는 1998년(5.1%) 한 해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였으며, 33.8%의 국가채무비율도 국가채무 통계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1997년 이래 가장 높았음



## 재정악화 요인

- 2007-2015년 기간중 G20 선진국의 정부부채비율의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절반 정도가 세입감소(성장을 하락 및 금융산업 침체에 따른 세원 감소)이며 다음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및 금융지원정책, 부채동학(금리 > 성장률)
  - 우리나라는 빠른 경기회복으로 세입이 개선(국세증가율 : 2009년 ▲1.7% → 2010년 +3.6%)되고 있어 재정수지 개선 및 국가채무 증가 억제에 기여하고 있음
    - 향후 '넓은 세원-낮은 세율'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조세감면 사전제한제도 등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강화, 성실신고 유도 등 세정노력을 강화할 필요
  - 또한 빠른 경기회복으로 2010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규모를 2009년에 비해 대폭 축소시킬 수 있었음
    - IMF가 지난 5월 재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더딘 경기회복으로 선진국의 위기대응 재정정책(감세-지출확대) 규모는 2010년 GDP 대비 1.9%로 2009년(2.0%)과 비슷한 반면, 우리나라는 빠른 경기회복으로 2010년 정책규모가 당초 GDP 대비 4.7%에서 2009년 수준(3.6%)보다 작은 1.1%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국채금리보다 높아 부채동학(debt dynamics) 측면에서도 선진국들에 비해 유리한 상황
    - 국내전망기관의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5.0-5.9%) vs 국고채 3년물 금리(1-8월중 평균 3.9%)

## 국가채무 건전성

- 한국조세연구원의 최근 28개 OECD국가들(멕시코, 터키 제외)을 대상으로 한 국가채무 건전성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국가채무 건전성 지표들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OECD에 따르면 2010년 우리정부의 총금융부채는 GDP 대비 36.2%로 28개 OECD국가 중 **3번째**로 작을 전망
    - 이는 다른 OECD국가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된 국민계정상의 일반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총금융부채 기준이며, 한국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상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36.1%임
  - 방법 1) 종합순위 :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순채무, 성장률-금리 격차 등 3가지 지표를 선정하여 국가별 순위를 부여한 후 지표별 순위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건전성이 **가장 양호**
  - 방법 2) IFS(Index for Fiscal Sustainability) :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 설정된 목표의 달성가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IMF가 2003년에 개발한 지수로, EU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비율 한도(GDP 대비 3% 및 60%)를 목표로 설정하여 IFS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가 28개 OECD국가 중에서 **5번째**로 양호
  - 방법 3) FS gap : 국가채무비율 안정화(Fiscal Sustainability)를 위해 필요한 기초재정수지와 실제 기초재정수지와 의 격차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실제 재정수지가 필요 기초재정수지보다 1.58%p 양호하여 스웨덴에 이어 **2위**

## ■ 향후 국가채무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

- 순채무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 : 국가채무의 절대수준을 낮게 유지할 뿐 아니라, 채무증가 속도에 맞춰 국가 보유자산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
- 국채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 : 국채발행 원활화 및 국채 수요기반 확충 등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
- 국채 평균만기 장기화 : 장기률(10년-20년) 국채발행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보유국채의 평균만기 장기화 유도

## ■ 또한, 국가채무 건전성을 다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기 지표들 이외에 대외채무 비중, 민간채무, 경상수지 등의 지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대외채무 비중 및 가계저축률** : 대외채무 비중이 높고 가계저축률이 낮을수록 위기에 취약
  - 그리스, 포르투갈 등 PIGS국가들은 대외채무비율이 높아 국가채무 리스크가 큰 반면, 일본은 국가채무 규모는 매우 크지만, 국내채무가 대부분이어서 단기간 내 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대외채무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계부문의 저축률이 높아야 하는데, 일본의 경우 막대한 규모의 국채발행을 국내에서 대부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높은 가계저축률 덕분
- **민간채무 비율** :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 규모가 크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 재정건전성이 저해될 가능성 상존
  -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국가는 국가채무 뿐만 아니라, 민간채무 규모도 커서 국가채무 리스크가 더욱 상승
  -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우리나라 등은 국가채무 규모는 작지만 민간채무 규모가 커 잠재적 국가채무 위험 상존

- **경상수지**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재정적자와 더불어 해당 국가가 잠재적인 성장 능력 이상으로 수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기적으로 국가채무 건전성을 저해
  - 그리스, 포르투갈 등 PIGS국가들과 미국, 영국 등은 재정수지 외에 경상수지도 만성적인 적자상태여서 국가채무 리스크가 더욱 상승
  - 일본은 재정수지는 적자상태지만, 경상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여 중기적으로 국가채무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독일, 스웨덴, 스위스, 우리나라 등은 재정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도 양호하여 중기적으로 국가채무 건전성도 양호
  - 또한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절대규모는 2,742억달러에 달하며, 금액기준으로 세계 6위 수준

■ IMF 9월 1일자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이 22개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2015년 정부부채비율이 26.2%로 호주(20.9%) 다음으로 작을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정부부채비율 전망치와 추정된 부채한도(debt limit)의 격차로 재정여력(Fiscal Space)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가 22개 분석대상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정 부 대 응

### ■ 재정건전성 회복이 최대 화두로 부상 : 선진국들의 재정정책 기조가 경제위기 대응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로 이러한 정책기조의 이행이 가속화

- 지난 6월 토론토 G20정상회의에서 2013년까지 재정적자 절반 축소 및 2016년까지 정부부채비율 안정화 합의
-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건전화 조치는 ① 경직성 세출의 구조조정, ② 세입기반 확대에 요약됨
  - 복지지출 억제, 공무원 임금 동결 등 경직성 세출 분야의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
  -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병행
- 주요 선진국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입법을 통한 중장기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및 재정규율 강화
  - 독일 : 2009년 기본법(독일 헌법)을 개정하여 2016년(연방정부) 및 2020년(주정부) 균형재정 달성 법제화
  - 프랑스 : 2008년 개정 헌법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력한 중기 재정안정화 계획을 2010년 2월 발표
  - 영국 : 재정책임법(2009년 12월) 제정으로 재정건전화계획(2009~2015)을 수립하고 의회 모니터링 강화
  - 미국 : 법정지출 및 감세에 대한 PAYGO원칙 부활, 초당적인 대통령 직속 재정위원회 설치(2010년 2월)
- G20 국가 중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남아공 등 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재정목표 및 정책수단을 포함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추진중

■ 그러나 더딘 경기회복으로 선진국의 위기대응 재정정책(감세-지출확대) 규모는 2010년 GDP대비 1.9%로 2009년(2.0%)과 비슷

● 반면, IMF가 최근 재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빠른 경기회복으로 2010년 정책 규모가 당초 4.7%에서 2009년 수준(3.6%)보다 작은 1.1%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경기-재정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신속과감한 정책결정과 적극적 재정확대-조기 집행 정책을 통해 경기급락에 대해 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견실한 수출증가와 더불어 빠른 경제회복이 가능하게 함

- 이러한 경기급락 완충 및 빠른 경기회복은 재정수지 조기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등 '경기회복 ⇔ 재정수지 개선' 의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최근 남유럽 등의 재정위기 상황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었음

해당 국가	IMF의 추정 시기	2009년 7월 및 11월		2010년 5월		수정 규모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Argentina		1.5	0.0	1.5	0.0	0.0	0.0
Australia		2.9	2.0	2.8	1.8	-0.1	-0.2
Brazil		0.6	0.6	0.7	0.6	0.1	0.0
Canada		1.9	1.7	1.8	1.7	-0.1	0.0
China		3.1	2.7	3.1	2.7	0.0	0.0
France		0.7	0.8	1.0	0.5	0.3	-0.3
Germany		1.6	2.0	1.5	2.1	-0.1	0.1
India		0.6	0.6	0.6	0.4	0.0	-0.2
Indonesia		1.4	0.6	1.1	0.6	-0.3	0.0
Italy		0.2	0.1	0.0	0.1	-0.2	0.0
Japan		2.4	1.8	2.8	2.2	0.4	0.4
<b>Korea</b>		<b>3.6</b>	<b>4.7</b>	<b>3.6</b>	<b>1.1</b>	<b>0.0</b>	<b>-3.6</b>
Mexico		1.5	1.0	1.5	1.0	0.0	0.0
Russia		4.1	1.3	4.5	2.8	0.4	1.5
Saudi Arabia		3.3	3.5	3.3	3.5	0.0	0.0
South Africa		3.0	2.1	3.0	2.1	0.0	0.0
Turkey		1.2	0.5	1.2	0.5	0.0	0.0
United Kingdom		1.6	0.0	1.6	0.2	0.0	0.2
United States		2.0	1.8	1.8	2.9	-0.2	1.1
G-20 (PPP GDP weighted)		2.0	1.6	2.0	1.9	0.0	0.3
Advanced		1.9	1.6	1.8	2.0	-0.1	0.4
Emerging Market		2.2	1.6	2.3	1.8	0.1	0.2

## ■ 우리정부도 금년 예산부터 재정건전화 정책을 시작

- 2010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 및 국회의 노력으로 재정수지를 GDP 대비 약 2.3%나 개선시킴
  - 2010년 정부예산안은 2009년 추경 대비 총지출을 10조원(3.3%) 축소하는 등 약 19조원의 재정수지 개선 도모
  - 국회도 예산안 의결과정에서 세입증대 3.0조원(국세수입 1.8조원) 등 약 2조원 정도의 재정수지 추가 개선

### 2009년 추경 대비 2010년 예산안 및 확정예산

(단위: 조원)

	2009 본예산	2009 추경 (A)	2010 정부안 (B)	2010 확정 (C)	증감 (B-A)	증감 (C-B)
총 수입	291.0	279.8	287.8	290.8	8.0	3.0
총 지출	284.5	301.8	291.8	292.8	△10.0	1.0
관리대상수지(GDP대비)	△2.4%	△5.0%	△2.9%	△2.7%	2.1%	0.2%
국가채무비율	34.1%	35.6%	36.9%	36.1%	1.3%	△0.8%

- 정부는 향후 재정수지 2013-2014년 균형달성, 국가채무비율 30%대 중반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 정부의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2010년 9월)

(단위: 조원)

	2009 추경	2010 예산	2011 계획	2012 계획	2013 계획	2014 계획	연평균 증가율
총 수입	279.8	290.8	310-316	335-345	360-370	385-395	7%대
총 지출	301.8	292.8	306-311	321-326	335-340	350-355	4-5%
관리대상수지(GDP대비)	△5.0%	△2.7%	△2-2.3%	△1-2%	△1% 이내	흑자전환	-
국가채무비율	35.6%	36.1%	35-37%	30%대 중반	30%대 중반	30%대 중반 이내	-

# ■ 목 차 ■

## 1. 재정 악화 및 정부 대응

## 2. 향후 재정정책 과제

우리재정이 재정총량 측면에서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므로

향후 재정운용은 재정의 질적 측면(재정위험, 재정의 지속가능성-투명성, 세입-세출 구조, 지출의 효과성-효율성, 재정제도 등)의 개선에 치중할 필요

[ 재정위험 관리 ] [ 인구고령화의 재정부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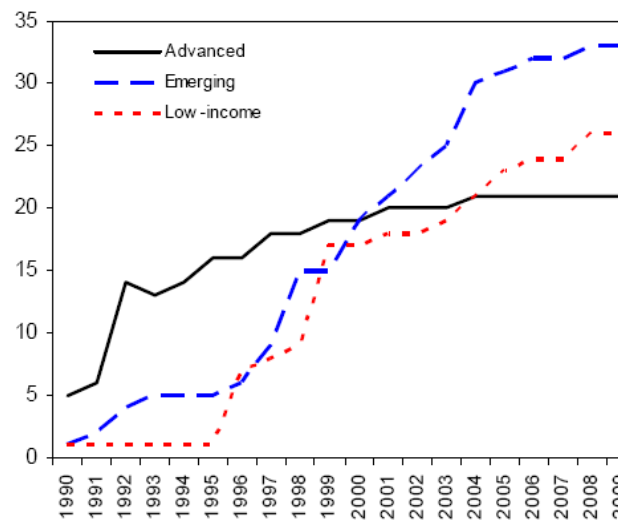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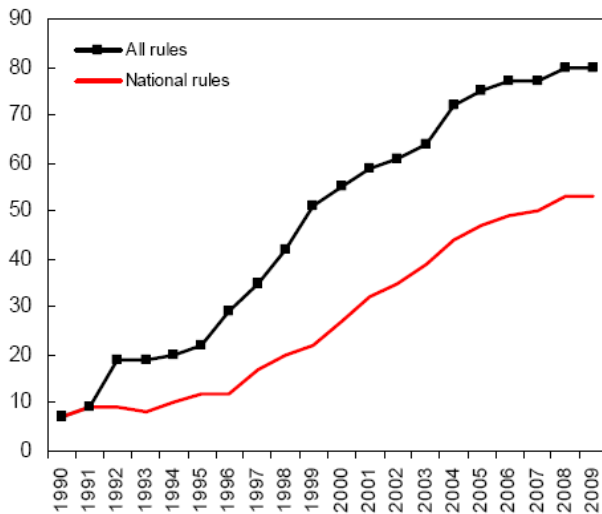
## 재정위험 관리

- 향후 재정정책은 재정운영의 신축성과 재정규율을 적절히 조화시켜 재정의 경기대응기능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 추구해야 하겠지만, 당분간 재정건전성에 치중하여야 할 것임
- 향후 재정건전성 회복정책은 총량관리 측면과 재정위험관리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할 필요
  - **총량관리** : 중기재정운용 체계 정비, 총량적 재정규율 강화 등을 통해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 목표 관리
    -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을 또는 세입 증가율보다 일정 정도 낮게 제한하는 ‘한시적 **재정준칙**’ 을 도입
    - 중기재정제도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 등 추진
  - **재정위험관리** : 재정의 시계를 보다 장기로 확장하거나 향후 국가재정 부담을 초래할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한 분석-관리를 강화할 필요
    - 저출산-고령화, 남북통일 등 중장기 재정위험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필요
      - \* 아이슬란드-멕시코-터키 제외 27개 OECD국가 작성중(우리나라 :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2030』 이 유일)
    -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위험 관리 강화 : 지방정부-공기업 등에 대한 부채 분석 및 관리, 우발채무(보증채무, BTL-BTO 등 민자사업 관련, 공적자금 투입가능성, 공적신용보증-공적보험 관련) 및 공적연금의 총당채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 정부의 자산부채 관리(ALM) 등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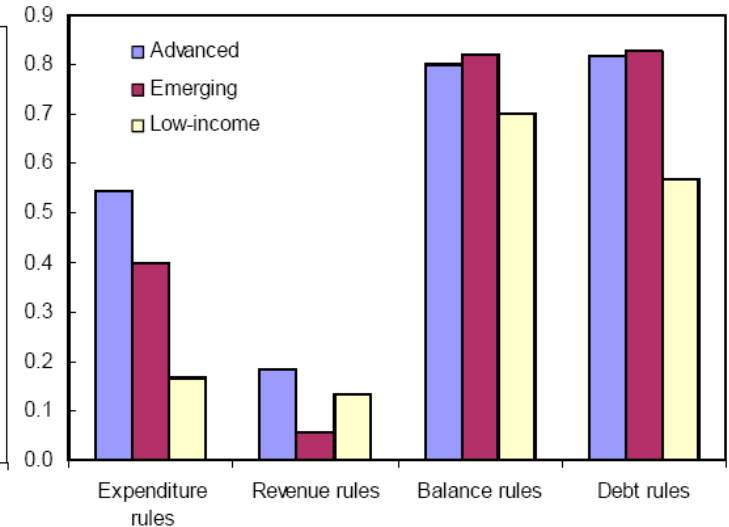
## ■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규율 확립의 필요성은 높지만 사전에 잘 설계되지 못할 경우 유명무실해질 수 있음

- 재정준칙(Fiscal rules)이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치(numerical numbers of targets)를 동반한 재정운영목표(fiscal objectives)를 법제화한 재정운영제도
- EU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한 재정규율(재정준칙의 적용범위 및 강도, 예산과정의 규율 등),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 개혁은 재정건전화 정책을 촉발시키지는 않지만 재정건전화 정책을 성공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적 의지가 담보되지 못하거나 재정운영제도가 이행을 뒷받침하지 못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거사-재정여건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재정정책 대응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직화·형식화되는 경향이 발생하여 교묘한 방법(creative accounting)을 통해 재정준칙을 회피하는 행태가 발생함

(재정준칙 도입 국가수)



(재정준칙의 형태, 비중기준)



■ 우리재정이 재정총량 측면에서는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므로 향후 재정운용은 **재정의 질적 측면**(재정 위험, 재정의 지속가능성-투명성, 세입-세출 구조, 지출의 효과성-효율성, 재정제도 등)의 개선에 치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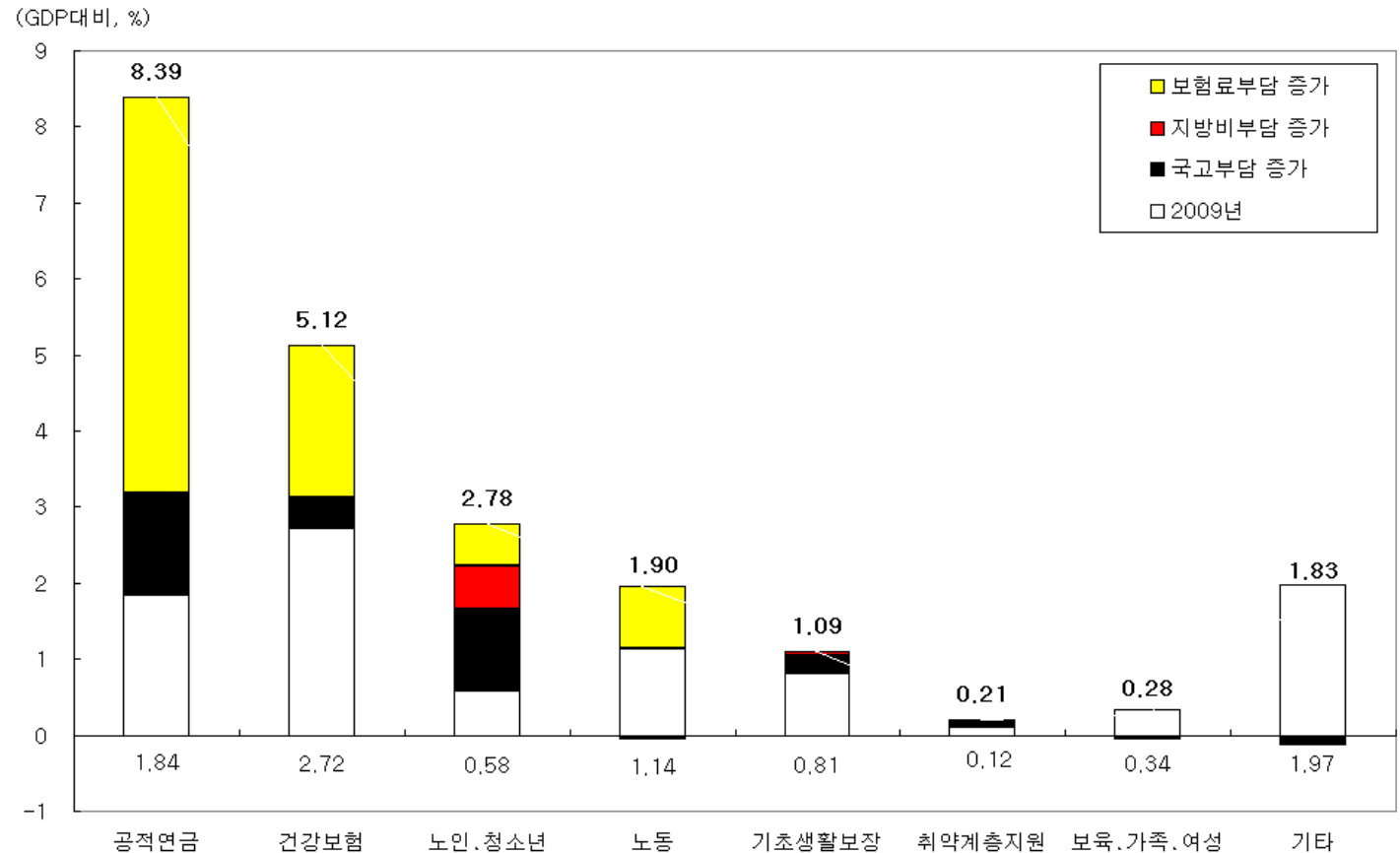
- 그리스 사태에서도 보듯이 정부 재정건전화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시장신뢰를 얻지 못하거나 재정통계나 재정 관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기초경제여건 악화 못지않게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책대 과정에서 예산외(off-budget) 부채 등 공공부문 전반의 리스크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대책도 필요
  - **지방채무**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위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지방채 발행이 크게 증가(2009년도에 8.5조원을 발행)하여 잔액이 25.6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2010년 지방세수(47.9조원)의 절반수준(중앙정부는 2009년 기준 약 2배 = 346.1조원/164.5조원)이고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2009년 기준)이 12.8%에 불과한 등 절대수준이 위기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움
    - \* 다만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재정책임성 약화, 세출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관리시스템 취약 등은 문제
  - 반면, LH공사·SH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급증** 문제는 향후 지자체 등의 재정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인상·사업축소 등 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음
    - 중앙정부 산하 22개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2009년말 GDP 대비 19.9%(212조원)로 2004년말 10.1% 대비 2배
      - \* 특히 LH공사의 부채규모가 2004년말 28.1조원에서 2009년말 109.2조원으로 최근 5년간 4배가 됨
    - 2008년말 지방공기업 총부채는 47.3조원(지방정부채무 19.2조원의 2.5배)으로 최근 5년간 22.1% 증가
      - \* 특히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부채가 최근 5년간 연 65.6%씩 증가하여 지방공기업 총부채의 52.4%를 차지

## 인구고령화의 재정부담

-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및 이에 따른 잠재성장을 하락에 직면해 있으며 통일비용(73조~2,300조원 추정, 독일통일 : 1991-2003년 중 매년 서독 GDP의 4-5% 소요) 부담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체제의 구축이 시급**

### [ 조세연 복지재정전망, 2009 ]

- 보건·복지지출 규모(GDP 대비)  
(2009) 9.5% → (2050) 21.6%
- 12.1%p 증가의 재원구조  
국 고 2.9%p  
지방비 0.6%p (자체사업 제외)  
보험료 8.6%p (대부분 적립중)
- 현행 복지제도 유지를 전제로 추정된 것이므로 향후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지출 규모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



- IMF도 재정건전화 정책은 단순히 한시적 확장정책의 철회(출구전략)나 국가채무비율의 위기이전 수준 복귀가 아니라,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당한 지속가능한 수준의 정부부채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할 것을 강조**

[ IMF 2010년 9월 보고서의 인구고령화 관련 재정부담 추계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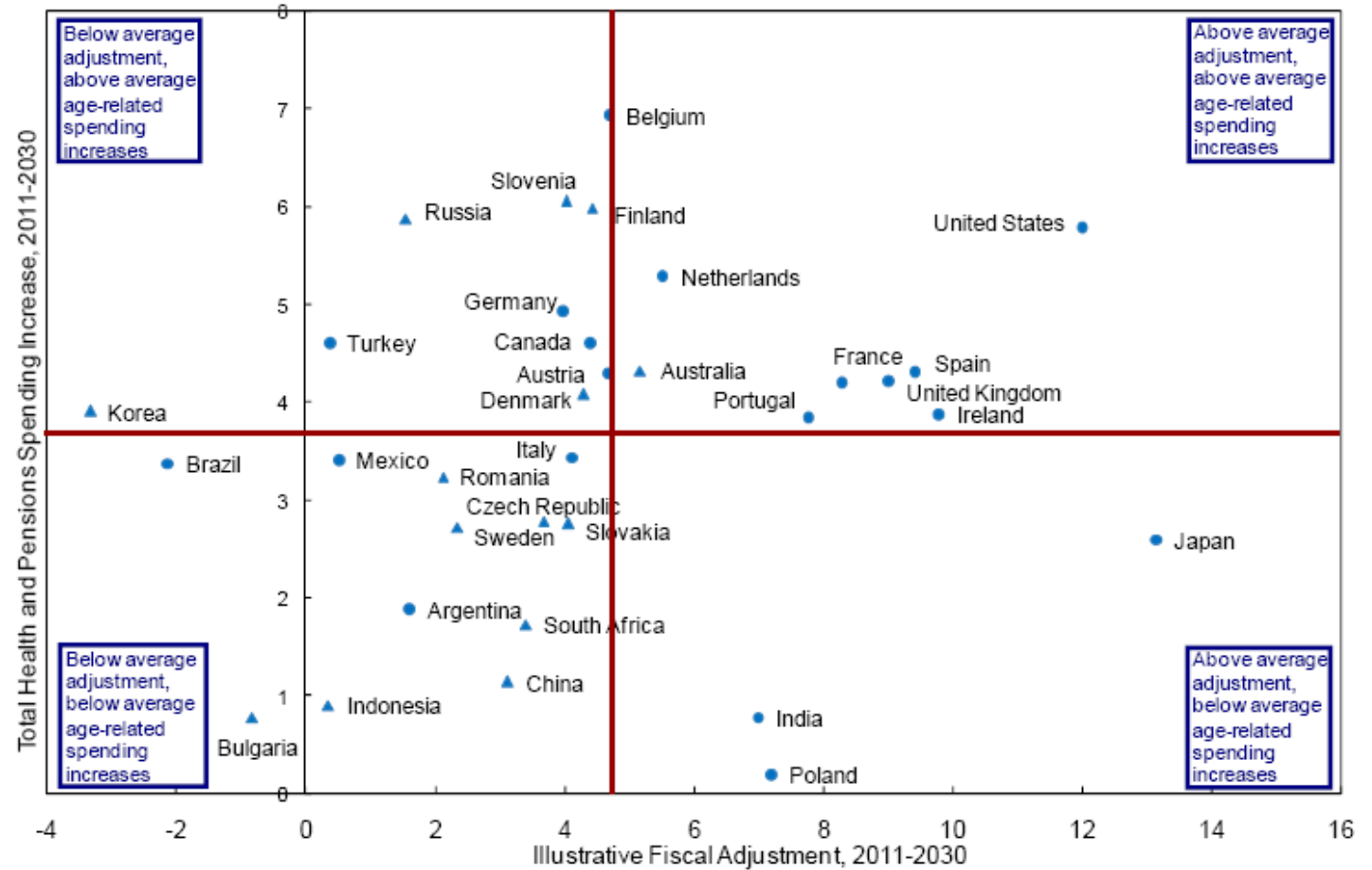
	Pension Expenditures					Public Health Expenditure					합 계				
	2010	2030	2050	2010 to 2030	2010 to 2050	2010	2030	2050	2010 to 2030	2010 to 2050	2010	2030	2050	2010 to 2030	2010 to 2050
Argentina	5.9	6.3	8.6	0.4	2.7	4.8	6.3	8.5	1.5	3.7	10.7	12.6	17.1	1.9	6.4
Australia	3.1	4.3	4.8	1.2	1.7	6.5	9.6	11.6	3.1	5.1	9.6	13.9	16.4	4.3	6.8
Brazil	8.5	9.8	15.8	1.3	7.3	5.1	7.2	10.1	2.1	5.0	13.6	17.0	25.9	3.4	12.3
Canada	4.7	6.3	5.9	1.6	1.2	7.6	10.6	13.4	3.0	5.8	12.3	16.9	19.3	4.6	7.0
China	2.2	2.4	2.6	0.2	0.4	2.2	3.1	4.4	0.9	2.2	4.4	5.5	7.0	1.1	2.6
France	13.5	14.2	14.2	0.7	0.7	8.7	12.2	14.6	3.5	5.9	22.2	26.4	28.8	4.2	6.6
Germany	10.2	11.5	12.3	1.3	2.1	7.9	11.6	14.4	3.7	6.5	18.1	23.1	26.7	5.0	8.6
India	1.7	2.1	0.9	0.4	-0.8	0.9	1.3	1.8	0.4	0.9	2.6	3.4	2.7	0.8	0.1
Indonesia	0.9	1.3	2.1	0.4	1.2	1.3	1.9	2.6	0.6	1.3	2.2	3.2	4.7	1.0	2.5
Italy	14.0	14.8	14.7	0.8	0.7	6.3	8.9	11.0	2.6	4.7	20.3	23.7	25.7	3.4	5.4
Japan	10.3	10.1	11.0	-0.2	0.7	6.9	9.8	12.8	2.9	5.9	17.2	19.9	23.8	2.7	6.6
<b>Korea</b>	<b>0.6</b>	<b>2.2</b>	<b>4.4</b>	<b>1.6</b>	<b>3.8</b>	<b>4.0</b>	<b>6.3</b>	<b>9.2</b>	<b>2.3</b>	<b>5.2</b>	<b>4.6</b>	<b>8.5</b>	<b>13.6</b>	<b>3.9</b>	<b>9.0</b>
Mexico	2.4	4.5	3.5	2.1	1.1	3.2	4.5	6.4	1.3	3.2	5.6	9.0	9.9	3.4	4.3
Russia	9.4	14.0	18.8	4.6	9.4	3.6	5.0	6.7	1.4	3.1	13.0	19.0	25.5	6.0	12.5
Saudi Arabia	2.2	3.6	7.1	1.4	4.9	2.9	3.9	5.5	1.0	2.6	5.1	7.5	12.6	2.4	7.5
South Africa	1.3	1.9	2.3	0.6	1.0	3.2	4.3	5.7	1.1	2.5	4.5	6.2	8.0	1.7	3.5
Turkey	7.3	10.5	11.4	3.2	4.1	3.6	5.0	7.2	1.4	3.6	10.9	15.5	18.6	4.6	7.7
United Kingdom	6.7	7.6	8.1	0.9	1.4	8.0	11.3	14.2	3.3	6.2	14.7	18.9	22.3	4.2	7.6
United States	4.9	6.0	5.7	1.1	0.8	6.7	11.4	14.9	4.7	8.2	11.6	17.4	20.6	5.8	9.0
G-20	5.8	6.8	7.4	1.0	1.6	5.3	8.0	10.4	2.7	5.1	11.1	14.8	17.8	3.7	6.7
Advanced	7.1	8.1	8.3	1.0	1.2	7.0	10.8	13.9	3.8	6.9	14.1	18.9	22.2	4.8	8.1
Emerging Market	3.8	4.9	6.1	1.1	2.3	2.6	3.7	5.2	1.1	2.6	6.4	8.6	11.3	2.2	4.9

■ 우리나라의 경우 **금번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부담 보다 향후 인구고령화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재정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남유럽 재정위기를 거울삼아 복지지출을 경제력에 상응한 적정수준으로 억제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

[ IMF 2010년 5월 보고서 ]

적정 정부부채 목표(선진국 60%, 개도국 40%) 달성에 필요한 2030년까지의 재정 구조조정 규모는 -3.3%인 반면, 인구고령화 관련 재정부담 증가규모(2030년 기준)는 3.9%로 G20국가 평균 이상

→ 더군다나 2050년 기준으로는 9.0%로 G20국가 중 자원부국인 러시아, 브라질 다음으로 큼



- 최근 소득분배 악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복지지출이 대폭 증가
  - 분야별 자원배분의 중점 전환 : 2003년을 전환점으로 가장 큰 지출비중 분야가 경제 → 복지
  - 최근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 : 9.8% (2005~2010년) \* 총지출 증가율은 6.8%
  - 외환위기 이후 주요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제도상 선진국 수준의 틀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단기간 내 급속한 복지재정 확대 속에서 비효율성 누적
  - 복지지출 규모는 아직 선진국보다 작지만 연금성숙도, 경제발전단계, 고령화율, 재정여건 등 국가별 특성 및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비교해야 함
- 선진국도 1960~1980년대에 걸쳐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건전화 기조에 따라 복지지출도 정체 또는 감소
  - 다만 남유럽권 국가(PIGS)는 정체 또는 감소 없이 지속적 증가로 최근 재정위기를 맞음
- 이에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유지, 성장·분배의 조화로운 균형, 노령인구 관련 지출 억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지출 지원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 필요
  - 향후 복지지출은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이미 도입된(built-in) 현행 제도만으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므로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과 복지 및 여타 분야의 세출 구조조정 없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유지 곤란
  - 이에 신규 복지제도 도입 또는 최근 도입된 제도의 지원 확대 보다는 복지재정 부담의 적정수준 관리가 바람직
  -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지출 수준 유지를 위해 **장기 복지재정 전망, 법정지출 통제의 제도적 장치 등을 통한 총량 관리체계 강화** 필요 → 복지지출, 지방이전재원 등 법정지출에 대해 PAYGO(Pay-as-you-go) 원칙

감사합니다



#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전병목



# 목 차

- 📌 고용동향
- 📌 고용문제의 원인
- 📌 국내외 정책사례
- 📌 향후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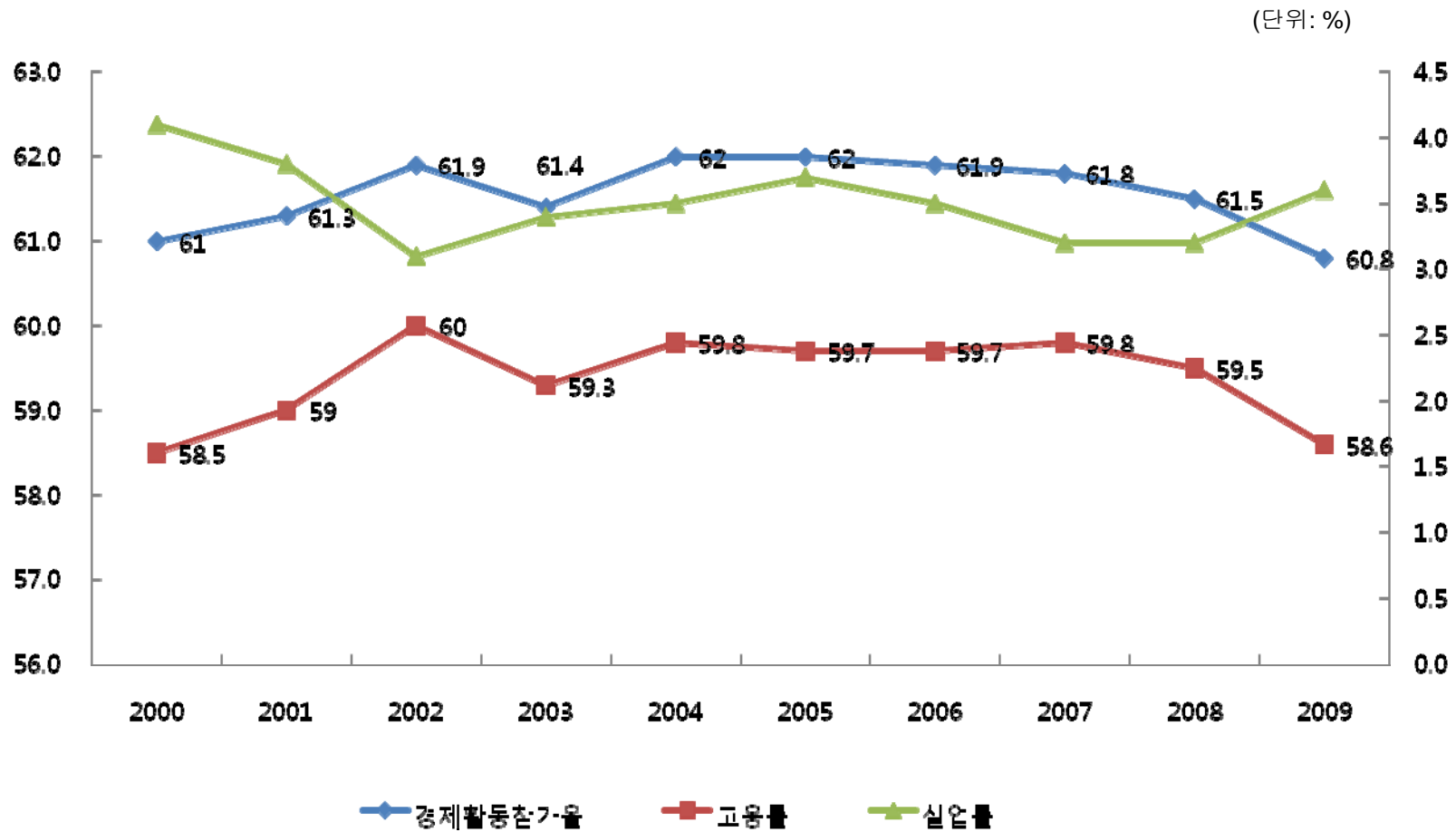
# 고용 동향

## 📌 고용동향의 주요 지표

- 경제활동참가율 →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고려 부족
- 실업률 → 체감실업률과의 괴리
- 고용율(취업자/생산가능인구) → 대표적 지표
  - 지표 세분화: 남자, 여자, 청년층(15~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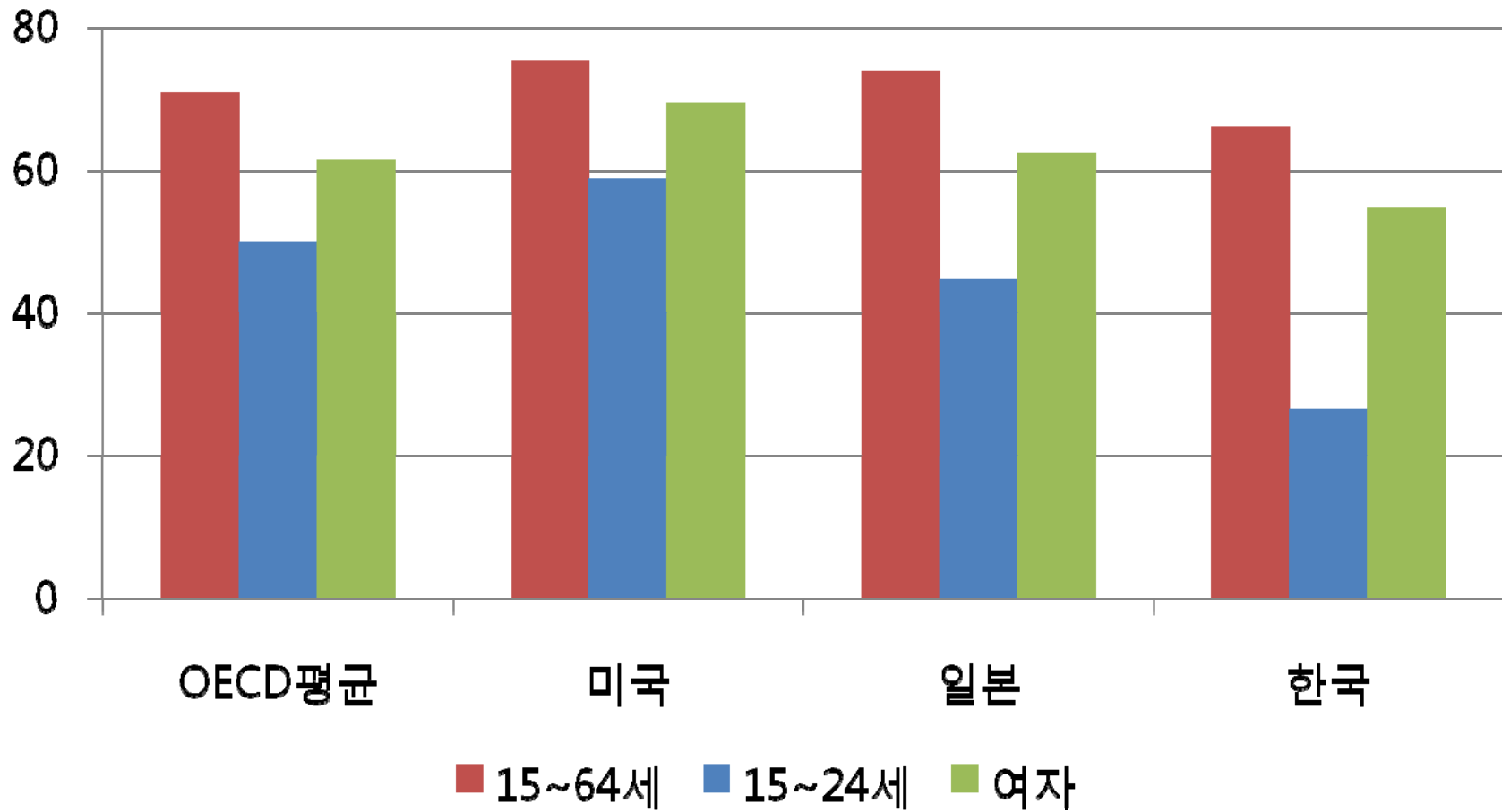


# 노동시장 주요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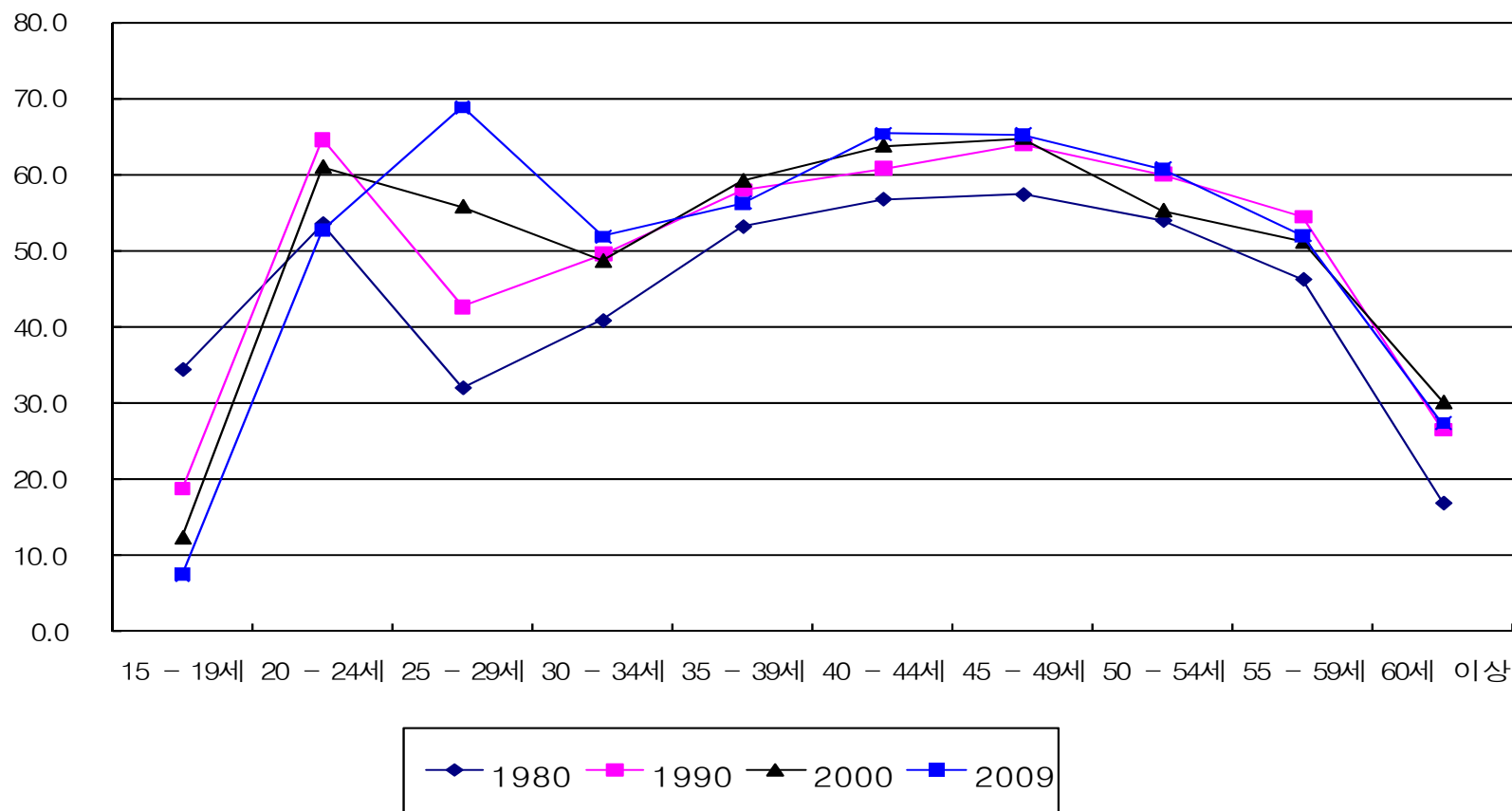


# 경제활동참가율 (20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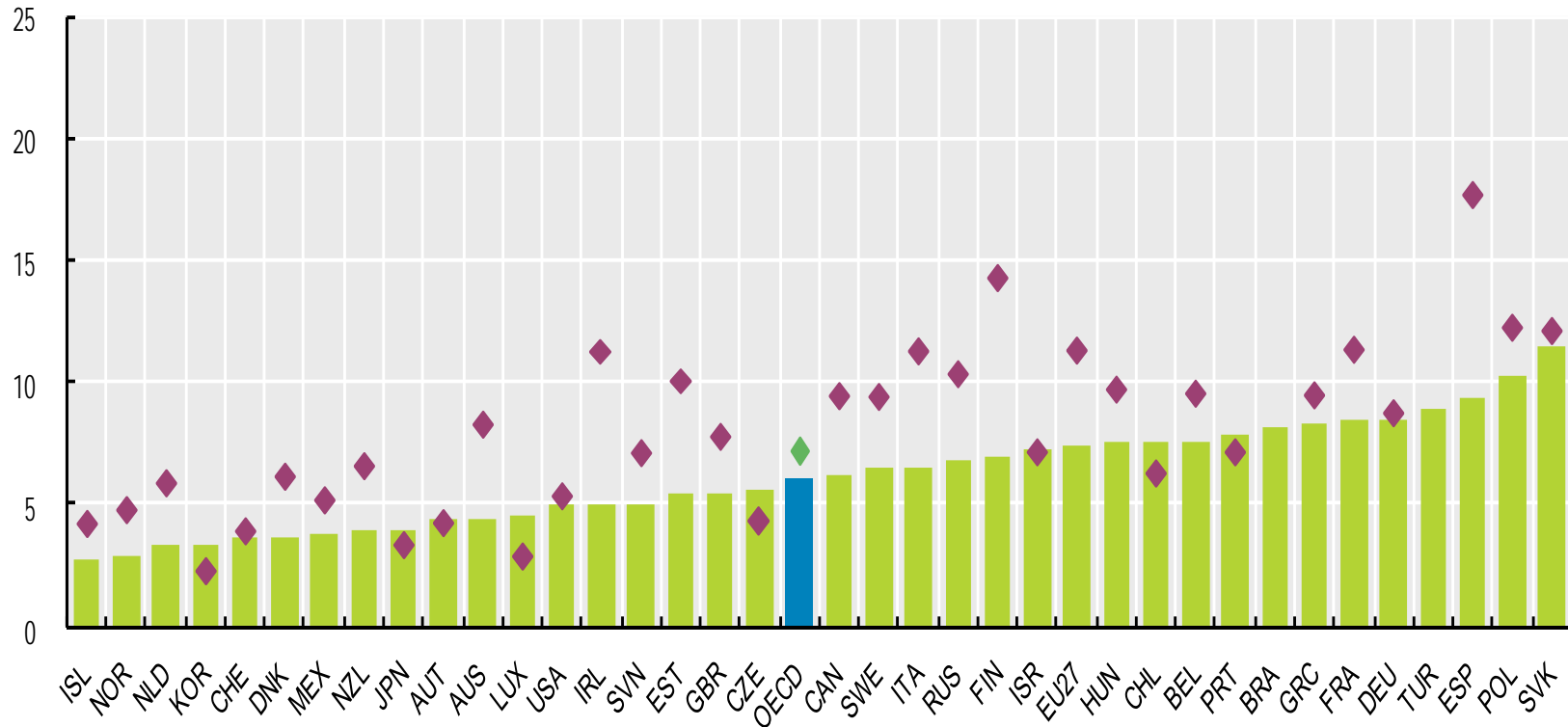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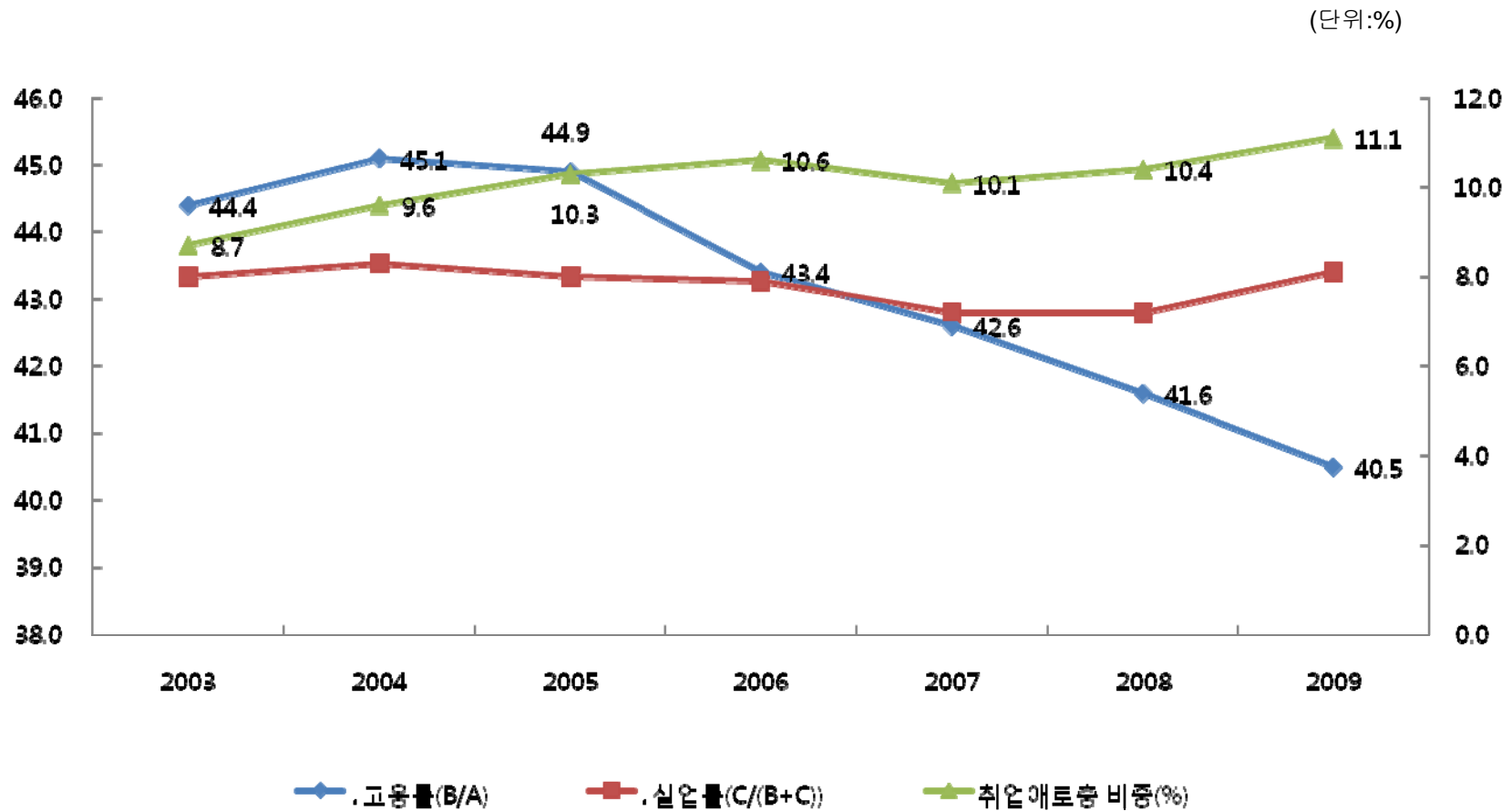
# OECD 국가의 실업률

■ Average 2006-2008 or latest available period      ◆ Average 1995-1997 or first available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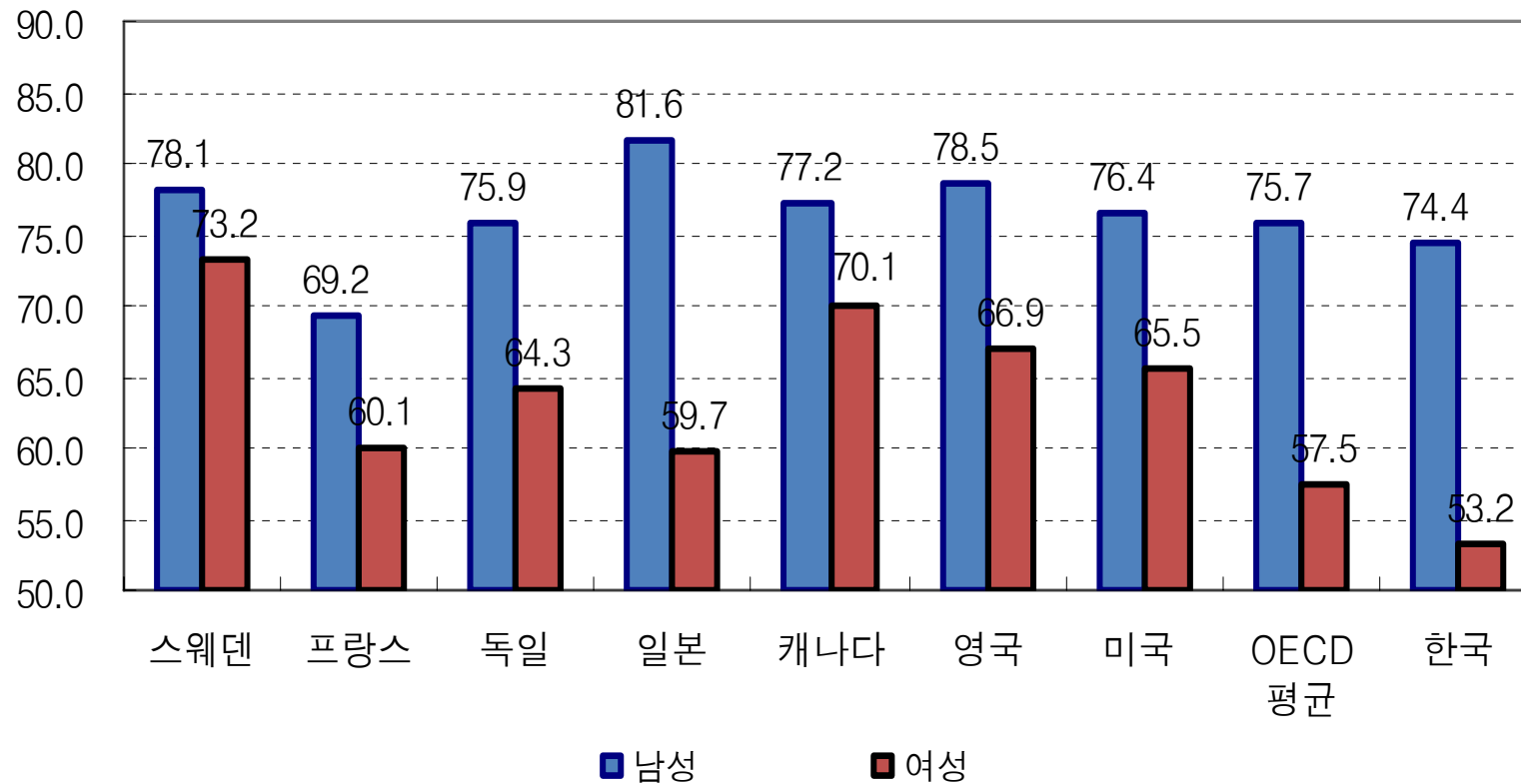


# 청년 고용률 및 취업 애로충 추이(15~29세)





## 주요국의 성별 고용률(2008년, 15 ~ 64세)





# 고용문제의 원인

- 📌 고용문제 원인진단: 비버리지 곡선
  - 구조적 문제 혹은 경기변동적 문제
- 📌 인력수요-공급 구조의 미스매치
  - 고등교육 진학률 v.s. 대졸자 취업률
- 📌 긴 근로시간
  - 신규고용 능력 약화 요인
- 📌 자본집약적 경제성장
  - 노동-자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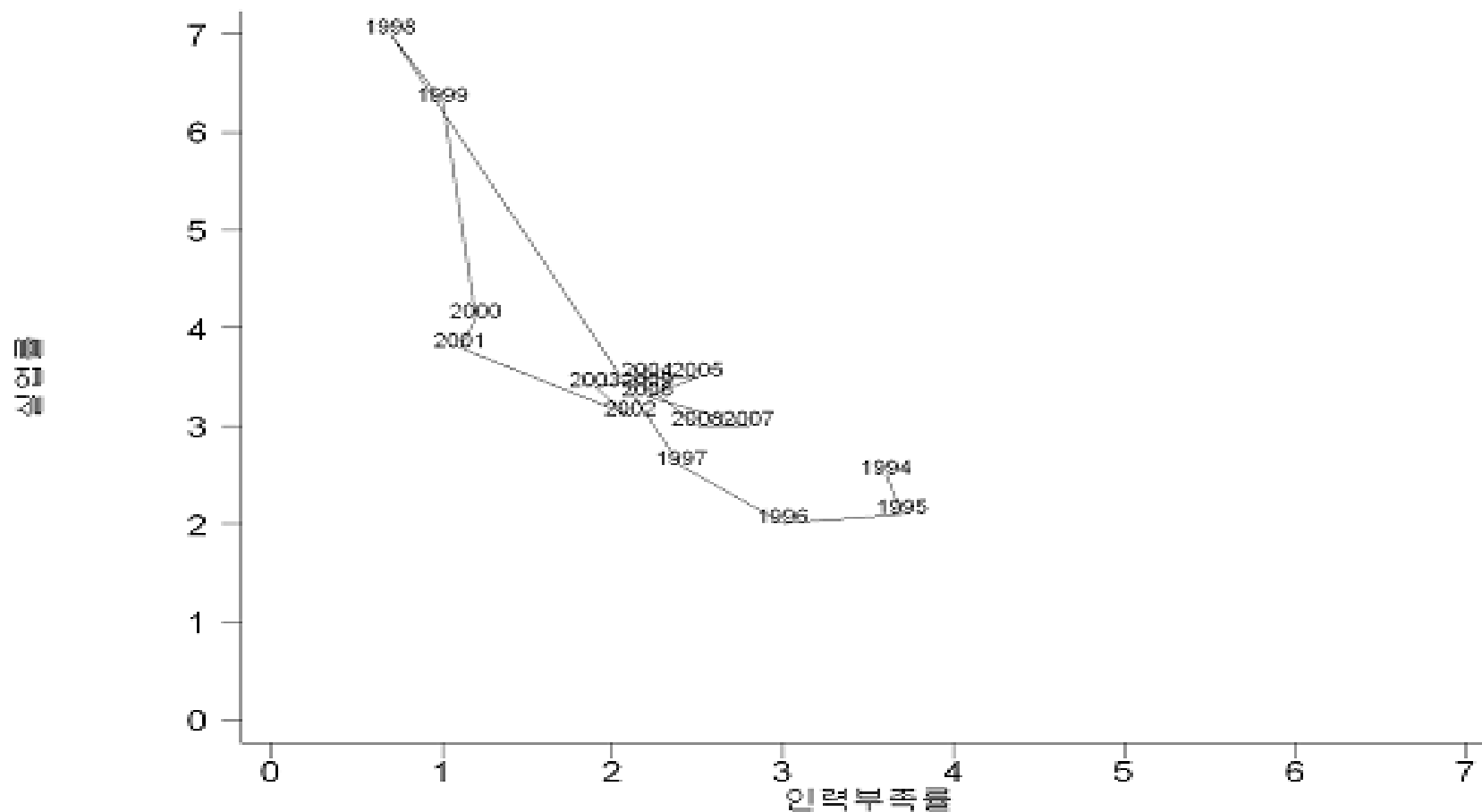


# 비버리지 곡선(1)

- 📌 실업률과 인력부족률의 상관관계 분석
  - 일정한 반비례관계를 갖고 변하는 경우 → 경기순환적 요인
  - 반비례 관계 자체가 변하는 경우 → 경제구조적 변화 요인
- 📌 우리나라 실업요인 추정
  - 1999~2001기간, 2001~2007기간: 구조적
  - 1997~1999기간, 2007~2008기간: 경기순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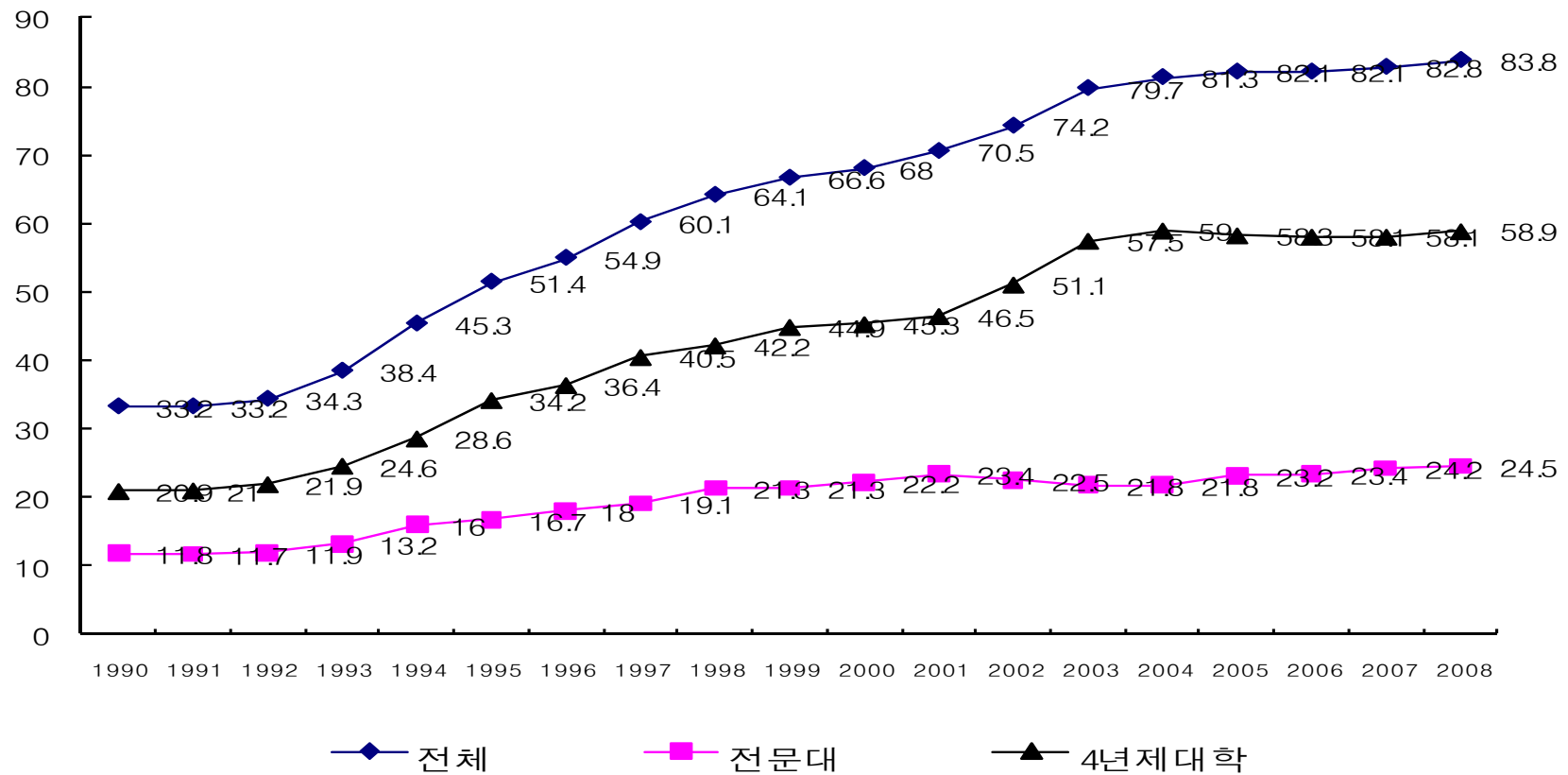


# 우리나라 비버리지 곡선(1994~2009)





# 대학 진학률 추이 (1990~2008)





## 낮은 대졸자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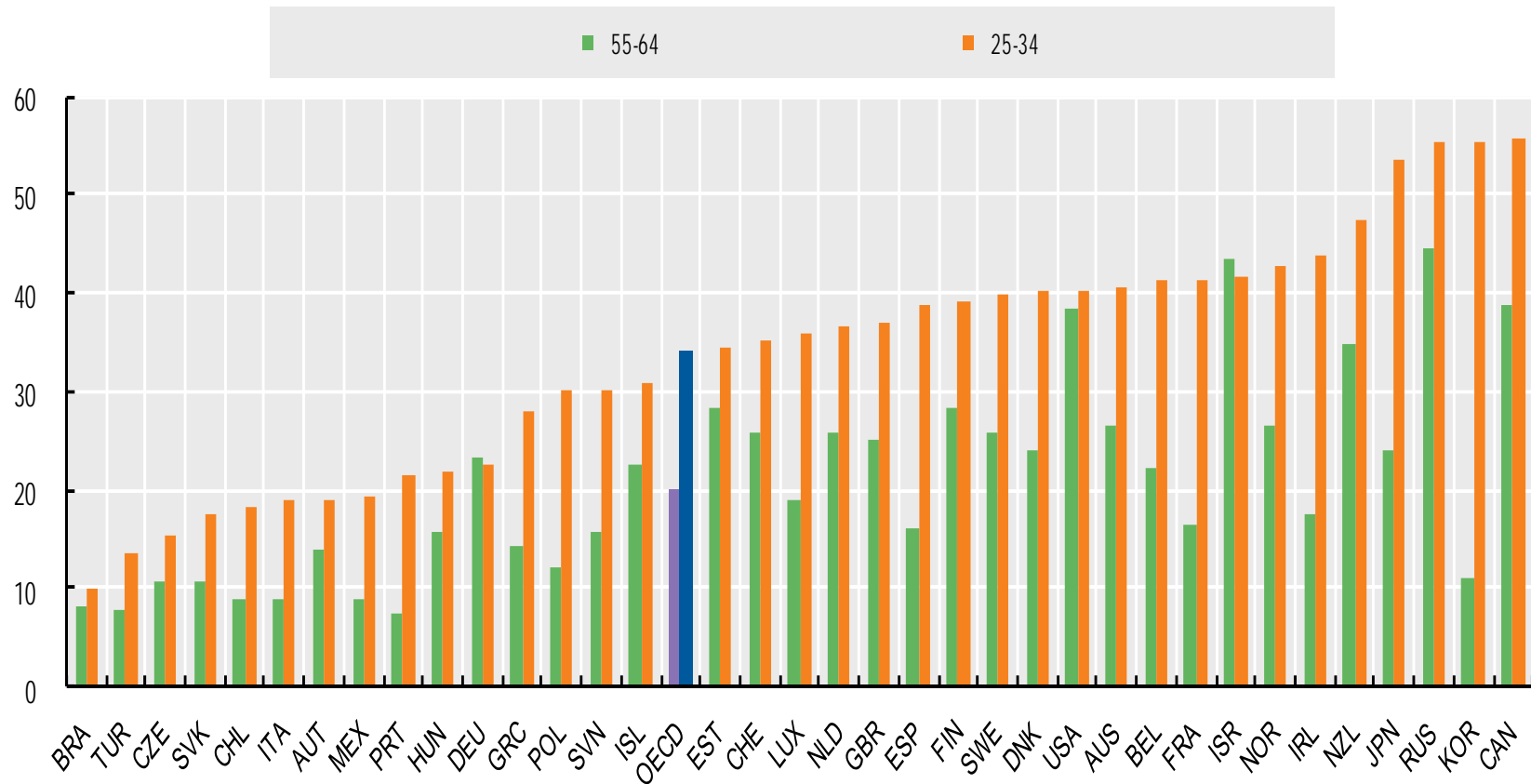
	2006	2007	2008	2009
전체 취업률	75.8	76.1	76.7	76.4
상용직 취업률	58.4	56.8	56.1	48.3

주: 신규대졸자 기준 취업률(%)

- 2009년 학력별 졸업자 총 65.8만명
  - 대졸이상 55.4만명(전문대 19.2, 대학교 28.2, 대학원 8.1만명)
  - 고졸 10.4만명(인문계 6.4, 전문계 4.0만명)
- 사업체 규모별 인력부족률 추이
  - 5~9인 기업: 1.9%(2000) → 5.7%(2005) → 5.2%(2007) → 4.1%(2009)
  - 10~29인 기업: 1.8%(2000) → 3.3%(2005) → 3.5%(2007) → 3.4%(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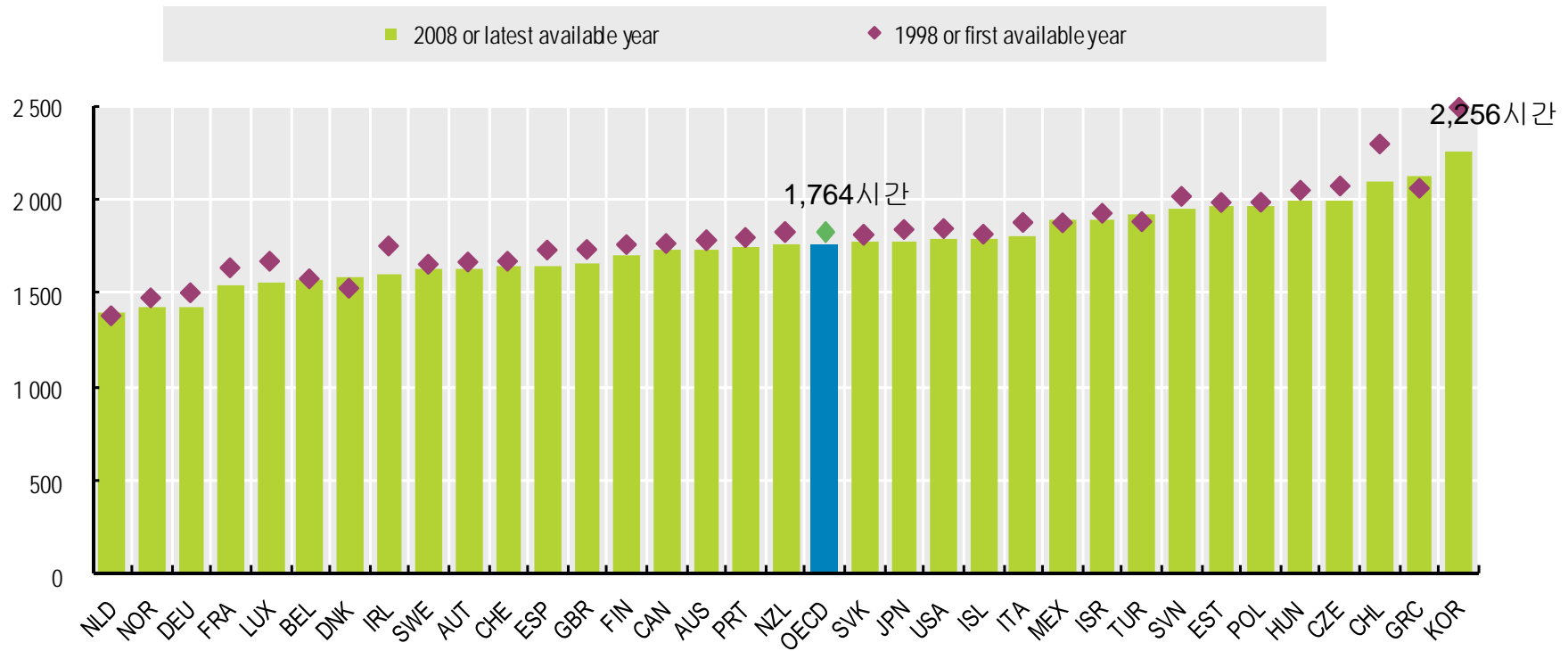


# 연령별 OECD국가의 고등교육 진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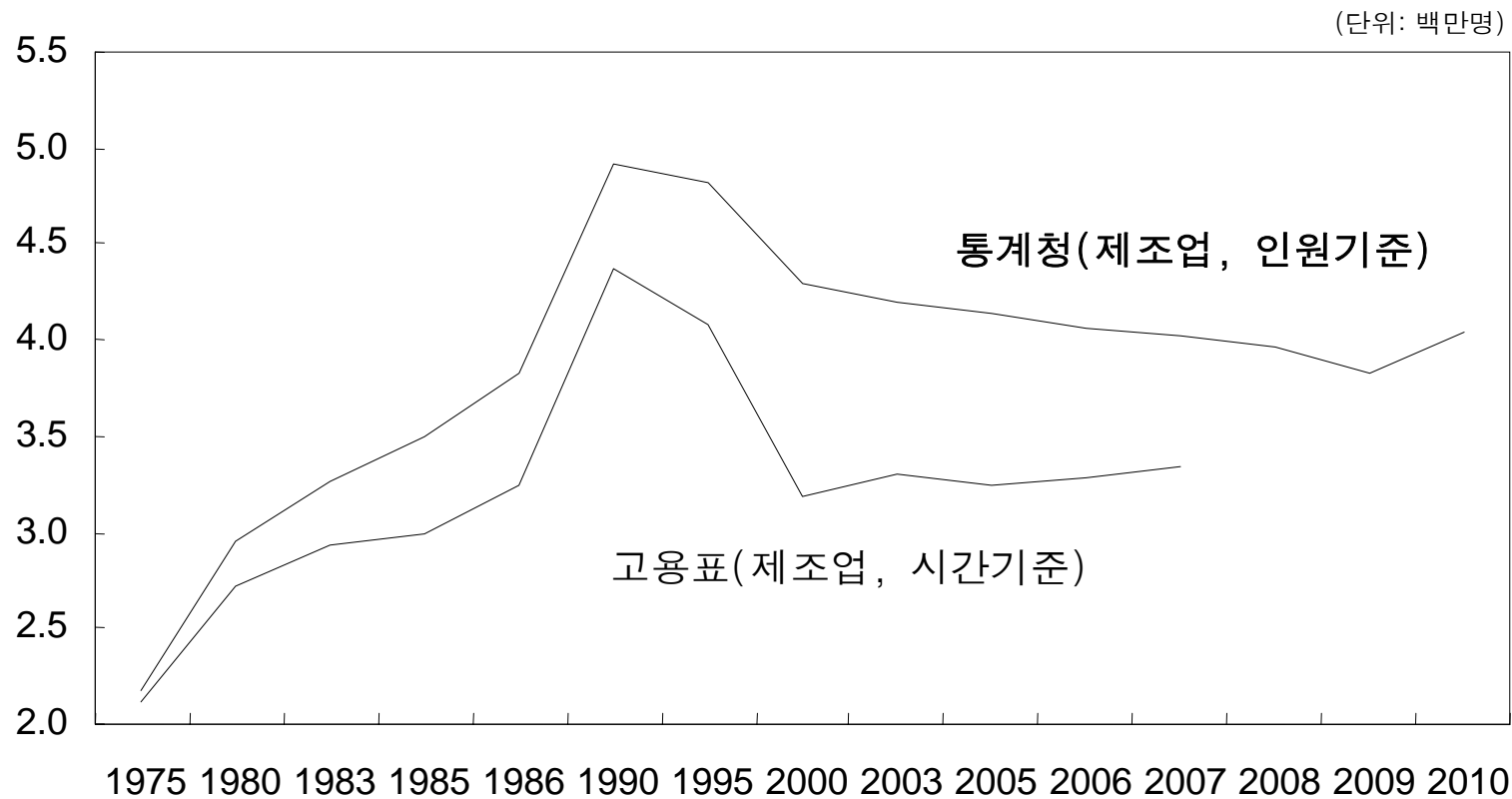
# OECD국가 연평균 근로시간



- 긴 근로시간의 원인
  - 노무관리의 용이성, 근로시간에 대한 낮은 인식,
  - 월급 급여체계 등



# 취업자 수준과 근로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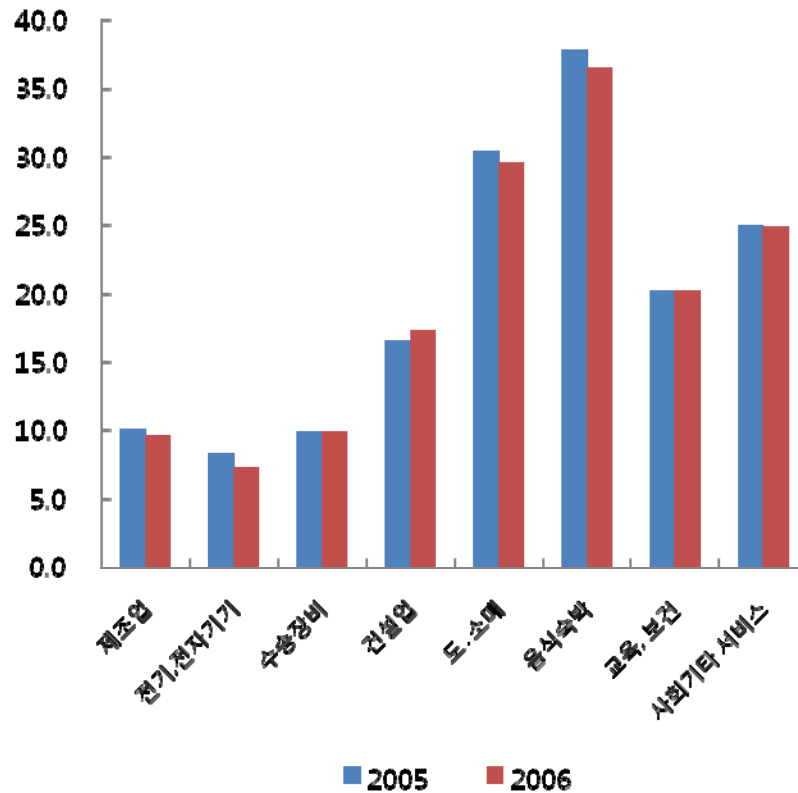
##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국가별 비교 (1986-1997, 1995-2006)

국가	1986-97	1995-2006
EU 15국	0.813	0.599
미 국	0.610	0.629
일 본	0.270	0.310
독 일	0.719	0.833
네덜란드	0.310	0.758
프 랑 스	0.420	0.671
영 국	0.787	0.290
스 웨 덴	1.053	0.559
한 국	0.276	0.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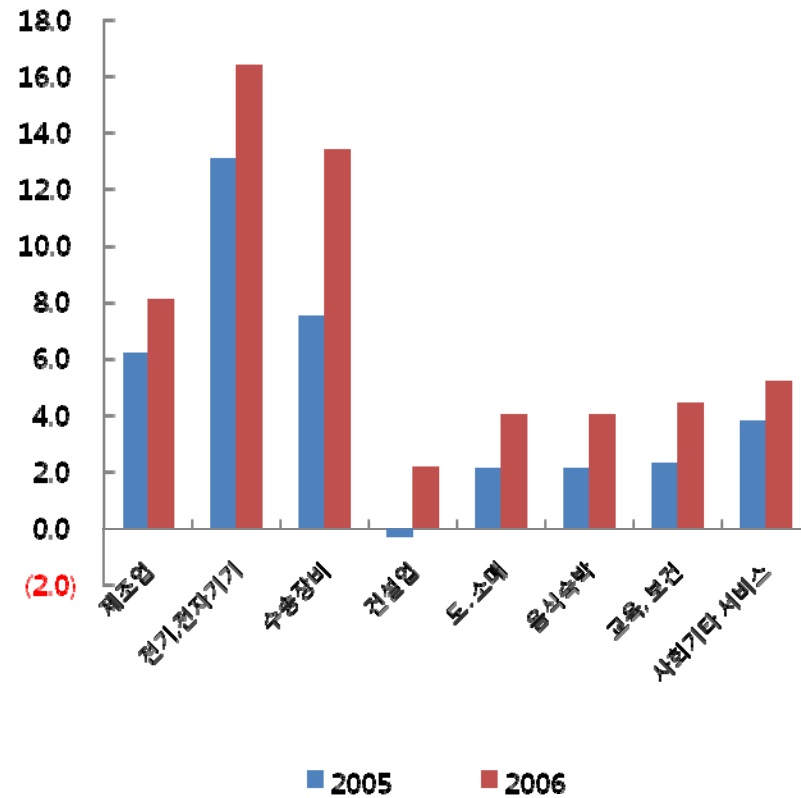


# 산업정책의 고용영향 감안 필요

취업유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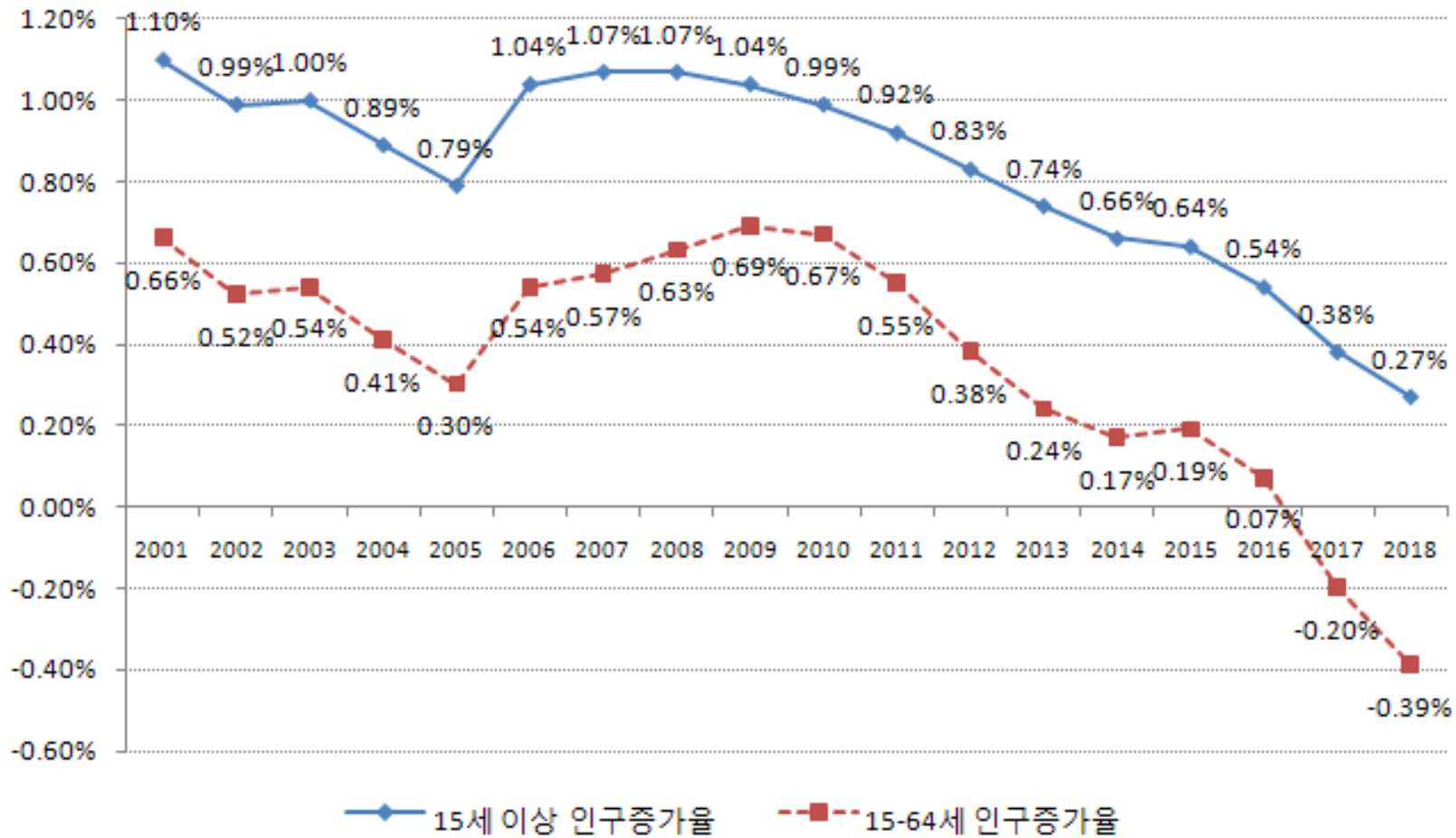


생산성증가율





# 향후 전망: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 국내외 정책사례(1)

## 📌 외국의 최근 정책사례

- 각국은 경기상황, 실업률,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정책시행
- 독일, 프랑스는 재정지출 규모가 높은 그룹
  - 반면 영국, 호주는 작은 국가이며 일본, 캐나다는 중간 규모의 국가
-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노력보다 노동공급 활성화, 미스매치 완화, 실업자 사후 소득보전 등에 중점
  - 반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노력은 일본의 사회서비스 확대 노력 정도



## 국내외 정책사례(2)

- 외국 고용관련 조세정책은 고용주의 고용비용 인하, 근로자 직접지원 등의 형태
  - 고용과 연계한 사회보험료 면제: 아일랜드
  - 전반적 사회보험료 인하: 핀란드
    - 고용주 부담 인하라는 경기대책 성격이 강함
  - 근로자 직접지원: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캐나다, 미국, 영국 시행
    - 저소득자 소득 지원과 근로장려라는 2가지 목적으로 과거부터 시행
  - 고용과 직접 연계된 조세지원은 1970~1980년대(캐나다는 1990년대) 주로 시행



## 국내외 정책사례(3)

- 📌 우리나라 고용관련 정책은 주로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고용창출에 중점
  - 청년인턴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일자리나누기 사업, 기타 각종 고용지원/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 📌 조세지원 정책은 제한적으로 시행
  - 지원대상의 특정화, 단기간 시행, 정책시차 축소 등 효율성 제고 요건 달성에 어려움
  - 사례: 고용증대세액공제,
  - 극복노력: 근로장려금제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 등



## 국내외 정책사례(4)

### 📌 청년인턴제

- 취업기회가 줄어든 청년층에 경력개발 등 취업능력 제고에 기여
- 단기임시직 중심으로 고용보호 측면의 한계

### 📌 사회서비스일자리, 일자리나누기 사업 등

- 사회서비스일자리 활성화 사업은 부처간 중복조정, 전달체계 효율화, 수요자 지원형 정책체계구축 등 필요
-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 초과근무 관련 제도개선, 근무시간에 대한 인식 개선



## 향후 정책방향(1)

### 📌 장단기 과제로 구분

- 경제주체들의 반응속도, 기대효과의 지속성 감안

### 📌 중장기 정책과제

- 교육-고용부문의 미스매치 완화
  - 직무급, 대학 구조조정, 산학협력 강화 등
- 긴 근로시간 관행 개선
  - 임금구조 개선, 시간급 제도 확산
- 고용유발능력이 높은 산업 육성



## 향후 정책방향(2)

### 📌 단기정책과제

- 여성의 노동공급 촉진
  - 보육환경 개선과 함께 수요자 중심 지원제도
  - 단시간 근로직종 개발, 맞벌이 부부 지원강화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출 지원
  - 청년인턴사업의 발전·상시화 검토
- 기존 정책의 효율화, 단순화
  - 고용창출, 고용지원/직업능력개발사업을 평가하여 분야별 주-부 프로그램 구조로 단순화
  - 직접적 고용창출은 단기간으로 제한
  - 자본투자 중심 지원정책은 노동-자본 균형 유지



# Thank you !